

덜어내고, 집중한다

中企 지원사업 효율화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방안

22개 부처가 운영하는 671개·3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17개 부처 232개 사업(약 50%)을 효율화하여 4조원을 절감한다. 절감된 예산은 고성과·랜드마크 사업에 재투자되며, 그 핵심은 新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등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연 300개사를 발굴해 맞춤형·목음·장기간 방식으로 최장 5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4조원

예산 절감 (△16%)

232개

효율화 사업 (약 50%)

300개사

연간 혁신기업 발굴

100억**+α**

기업당 최대 지원 (5년)

00 두 대책, 하나의 흐름

이번 발표는 별개의 두 대책이 아니라, ‘덜어낸 재원으로 될 곳에 집중한다’는 하나의 설계다. 전(全)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정리해 확보한 4조원이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이라는 랜드마크 사업의 재원이 된다.

PART 1

奎부처 中企 지원사업 효율화

유사·중복, 소액·나뉘주기, 저성과·관행 사업을 통폐합·폐지·감액

효율화 대상	17개 부처 472개 · 25.5조원
통폐합·폐지	88개 (△19%)
감액	144개 (31%)

PART 2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최상위 1% 혁신기업에 맞춤형·목음·장기간 집중 지원

발굴 규모	年 300개사
'27년 재정투자	3,103억원
지원 기간	최장 5년 (2+3)

연결 고리

효율화로 절감한 4조원 → 부처협업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3,103억원(중기부 2,388억원 + 국방·방사청·복지·기후·문체부 등 715억원) 등 고성과·랜드마크 사업에 재투자

PART 1 목차

- 01 추진배경 — 671개·31조원의 현실
- 02 그간 추진 경과 — 효율화 대상 설정
- 03 사업 수 감축 및 불필요 예산 절감
- 04 절감된 예산의 전략적 재투자
- 05 성장 촉진·성과 중심 지원체계 개편

PART 2 목차

- 06 추진배경 — 네 개의 신성장 분야
- 07 기존 지원체계의 보완 필요사항
- 08 정책방향 — 패러다임 전환
- 09 협업체계와 300개사 발굴
- 10 목음 지원과 5년 포트폴리오
- 11 분야별 관계부처 정책 집결
- 12 향후 추진계획

PART 1

쏠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같아서 빚어낼 필요가 있다.” 유사·중복, 소액·나뉘주기, 저성과·관행 사업이 지속되며 예산·행정 낭비와 기업의 혼란이 발생해 왔다. 17개 부처가 사업 절반을 손보고 4조원을 절감한다.

△19개

유사·중복 통폐합
예산 △2.4조원

△65개

소액·나뉘주기 탈피
예산 △0.4조원

△31개

저성과·관행 퇴출
예산 △1.3조원

01 추진배경 — 671개·31조원의 현실

중기부·산업부·노동부 등 22개 부처가 금융·기술·인력·경영 등 분야에서 671개(내역), 3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26년). 최근 3년간 사업 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



중앙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26) 단위: 억원, ()는 사업 수

부처명	합계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합계	309,515(671)	162,641(69)	65,040(279)	29,821(60)	8,846(65)	2,034(13)	14,178(47)	26,953(138)
중기부	133,600(141)	79,950(26)	21,913(28)	1,497(13)	2,894(11)	1,061(5)	11,887(20)	14,398(38)
금융위	36,598(7)	36,506(5)	-	-	-	-	29(1)	63(1)
산업부	34,956(130)	5,780(7)	25,204(86)	130(5)	2,956(15)	-	88(1)	798(16)
노동부	33,944(42)	5,409(3)	26(1)	27,428(31)	-	50(1)	300(1)	731(5)
기후부	26,031(72)	13,834(5)	7,423(36)	-	349(5)	-	219(1)	4,207(25)
문체부	14,284(35)	9,455(5)	478(5)	69(1)	70(1)	-	914(8)	3,299(15)
농식품부	11,889(60)	8,539(13)	1,204(18)	107(3)	1,442(13)	89(3)	271(5)	238(5)
과기부	8,519(96)	-	6,031(64)	553(5)	182(10)	-	311(5)	1,442(12)
그 외	9,694(88)	3,168(5)	2,761(41)	37(2)	953(10)	834(4)	159(5)	1,777(21)

문제는 세 가지 유형으로 반복된다

유사·중복
목적·대상·내용이 같은 사업을 부처내·부처간 중복 운영. 중기부-산업부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 기후부 환경-에너지 기업 융자 지원(기존 환경부 사업과 산업부 이관 사업 중복) 등.

소액·나눠주기
50억원 미만 사업이 거의 절반('26년 309개/671개), 기업당 5,000만원 미만 지원사업이 23.2%('25년 156개/617개). 선별보다 보편지원에 가까운 양상.

저성과·관행
실집행 부진, 수혜기업 성장 미미 등 저성과 사업과 목적 달성·경제 여건 변화로 불필요해진 사업을 관행적으로 유지. '24~'25년 '개선필요' 34개 중 16개(47%)는 오히려 차년도 예산 증액.

02 그간 추진 경과 — 대상 설정

3월, 효율화 대상 사업을 17개 부처 472개 사업·25.5조원으로 설정했다. 중기부는 지원사업 주무부처로서 소관 전(全) 사업을 모수로 삼아 심층 분석했고, 그 외 21개 부처는 SIMS에 등록된 사업 중 신규·인프라 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대상으로 삼았다.

기본 모수 · SIMS 기준

22개 부처 · 671개 사업 · 31.0조원

중기부 — 대상 확장

소관 전(全) 사업으로 효율화 대상 확장 (+118개, +3.1조원). 기관운영·보조, 벤처투자 등 추가.

중기부 외 21개 부처 — 제외 기준

- ① 구축이 시작된 인프라·기반 조성사업은 연차별 예산 확정 → 제외 (△173개, △6.2조원)
- ② 대·중견기업, 대학·연구기관 등에 주로 지원해 중소기업 지원비율 50% 미만 → 제외 (△78개, △1.7조원)
- ③ '26년 신규사업은 성과 판단 단계가 아니므로 제외 (△66개, △0.6조원)

실질 모수 · 효율화 대상

17개 부처 · 472개 사업 · 25.5조원

* 대상 17개 부처: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기후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지재처, 산림청, 조달청, 우주청, 금융위, 방미통위 / ①·②·③ 과정에서 소수 중소기업 지원사업만 운영하는 4개 부처는 전(全) 사업이 제외되어 대상 부처에서 제외

4 부처별 효율화 계획 수립·제출 (4~5월)

부처별 대상사업 중 유사·중복, 소액·나뉘주기, 저성과·관행 사업을 발굴하여 통폐합·감액 등 효율화 방안을 마련(3~4월)하고, 17개 부처 합산 예산 4조원(△16%) 절감 계획을 수립해 부처별 예산 요구안을 제출했다(5월). 중소기업정책심의회(5.22)를 통해 부처별 계획 수립 경과를 점검했다.

03 사업 수 감축 및 예산 절감

◇ 17개 부처 232개 사업(약 50%) 효율화 : 88개(△19%) 사업 통폐합·폐지, 144개(31%) 사업 감액 → 4조원 (△16%) 절감

①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사업 수 △19개 · 예산 △2.4조원

부처내·부처간 지원 내용이 일부 중복인 사업들의 중복 부분을 감액하고, 지원 목적·대상이 같은 사업은 1개 사업으로 일원화한다.

중기부 여러 예비창업 사업(도전 K-스타트업,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기업가형소상공인 등)을 '모두의창업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운영비 등 예산 절감 (△764.3억원)

기후부 미래환경산업육성(응자) 사업과 산업부에서 이관된 에너지절약시설설치(응자) 사업의 중복(온실가스 배출 저감 장치 도입 지원) 부분 감액 (△819억원)

산업부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중 중기·산업부 수출바우처 등과 중복인 해외전시회 개별 참여 지원 예산 폐지 (△73억원)

② 소액사업 통폐합 및 나눠주기 탈피 사업 수 △65개 · 예산 △0.4조원

196 → 143개

50억원 미만 소액사업(0.4조원)을 53개 감축(△27%)하고 1,309억원(△31%) 절감

106개 중 12개 폐지

기업당 5,000만원 미만 나눠주기 사업(6조원) 중 12개 폐지 (△11%), 32개 감액으로 2,760억원(△5%) 절감

기후부 소규모·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진단 지원(33억원)'과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 사업(51억원)' 통합

방미통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관련 소액으로 나뉘어 있던 ①제작 지원(10억원), ②컨설팅 지원(1.4억원), ③협의체 운영(3억원) 등 3개 사업을 1개로 통합

③ 저성과 사업 및 관행사업 퇴출 사업 수 △31개 · 예산 △1.3조원

4,819억원 절감

중소 지원사업 성과평가('23~'26) 미흡 83개 사업(2.8조원) 중 13개 폐지(△16%), 31개 감액 (△17%)

8,452억원 절감

목표 달성 또는 경제 여건 변화로 불필요해진 관행적 사업 정리 (18개 폐지, 35개 감액)

문체부 성과가 낮은 스포츠산업 금융 지원 예산 1,244억원(△50%) 절감 — 실행률 부진('24년 71.0%, '25년 68.6%), '24~'25년 성과평가 '개선필요'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구조개편으로 고업력기업 중심의 지원예산 2,677억원(△15.8%) 절감하여 혁신 창업기업에 집중

04 절감된 예산의 전략적 재투자

◇ 효율화로 절감된 4조원의 中企 지원 예산을 부처별 고성과 사업, 신규 랜드마크 사업 등에 재투자

부처협업 · 신규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3,103억원

新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등 신성장 분야의 혁신기업 300개사를 발굴하여 사업화·금융·인력 등을 묶음으로 최장 5년 지원한다. 신안보(국방부), 제약바이오(복지부), 기후테크(기후부), K-소비재(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중기부가 기업 발굴부터 묶음·연계지원까지 전(全) 과정을 협력한다.

중기부 2,388억원 국방부·방사청·복지부·기후부·문체부 등 715억원

중기부 중소 → 중견 도약(JUMP-UP) 고도화

유망 중소기업에 디렉팅·오픈바우처·네트워킹·연계지원 등을 3년간 지원하는 도약 프로그램('25~)의 고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확대. 지원대상 매출 기준 3단계(JUMP-UP 100 → 500 → 1,000)로 나누고, 단계별 우수성과기업은 이어달리기로 다음 단계 지원.

예산 ('26) 595억원 → ('27) 1,642억원

JUMP-UP 100(288억) + 500(1,156억) + 1,000(198억)

농식품부 농식품 우수기업 육성·글로벌 진출

우수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등에 원료 구매, 안전성·품질 관리, 물류 효율화, 마케팅 등 성장 전 과정을 지원. K-푸드 수출기업 대상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비관세장벽(EU PPWR 등) 해소 지원 강화.

예산 우수기업 육성 ('26) 798억 → ('27) 944억원

판로개척 ('26) 380억 → ('27) 543억원

조달청 공공조달 활용 판로 개척

조달청이 혁신 벤처·스타트업 판로 개척의 마중물이 되어 선도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수요기관이 시범사용 후 결과를 피드백하여 성과를 환류. 공공문제 해소에 기여할 R&D 지원 → 결과물 시범 구매 → 민수·해외시장 진출까지 원스톱 지원.

예산 국내실증 ('26) 624억 → ('27) 900억원

혁신제품 기술개발 ('26) 80억 → ('27) 102억원

산업부 중소형 조선사 수주 지원 확대

중소형 조선사 선박 수주가 실제 건조까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RG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

예산 무역보험기금출연 ('26) 705억 → ('27) 900억원

RG: 선수금(건조대금 40%)에 대한 금융기관 환급 보증

05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 체계 개편

◇ 中企 지원 예산을 '효과가 높은 혁신기업'과 '지역 성장'에 집중

심사체계 개편 — 성장성·잠재력 확인체계 도입

中企 지원사업에서 기업 심사 시 먼저 '성장성·잠재력'을 확인하고, 확인된 기업 중심으로 지원해 中企 정책의 성장촉진 효과를 높인다.
'27년부터 중기부 中企·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에 적용하고 범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성장성 보유 기준

매출 또는 고용 증가율 5% 이상

최근 3년 평균

성장잠재력 보유 기준

AI 기반 기업평가 상위 30% 이내

기보 K-TOP, 코데이터터 KOGPS — 재무·기술·인력·인프라 등 수십 개 지표를 복합 분석하여 향후 성장률 예측

지역 성장 촉진 —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역할당

中企 예산의 지역 투입 비중이 현(現) 지역 中企 비중(47%)보다 높아지도록 주요 사업별 지역 지원 비중 목표를 설정한다.

지역우대

비수도권을 인구감소, 균형발전,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3개 그룹(예: 성장·우대·특별지원)으로 나누고 국비 지원한도, 지원비율 등을 우대한다.

PART 2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방안

新安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는 글로벌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아이디어 기반의 빠른 진입과 선점이 필수인 분야다. 전통 대기업보다 중소·벤처 기업이 활약할 품목이 많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벤처·스타트업 출신이 글로벌을 선도하고 있다.

新安보

드론·우주·사이버보안

제약바이오

AI신약개발·헬스케어

기후테크

재생에너지·탄소포집

K-소비재

뷰티·푸드·패션·라이프

06 추진배경 — 네 개의 신성장 분야

각 분야에서 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으며, 그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는 기존 대기업이 아니라 기술·아이디어 기반의 중소·벤처 기업이다.

1 新안보

시장 변화 혁신 스타트업의 저비용·고효율 지능형 무기가 전장의 주역이 되고 있다. 약 500달러 수준의 드론이 수백만 달러 가치의 군사장비·시설을 파괴한다.

해외 사례 팔란티어(美)·헬싱(獨) 등 기존 방산기업 외 혁신기업이 장기 투자, 데이터 접근, 대규모 정부계약을 기반으로 초고속 성장. 헬싱('21년 설립)은 AI 기반 SW·자율무기·드론 개발로 기업가치 180억 달러(추정).

국내 병목 기존 체계기업 중심의 방산구조로 스타트업 진입이 어렵다. 중소기업 매출 비중은 전산업 44.9% 대비 방산 17.9%.

2 제약바이오

시장 변화 신약개발 전(全) 과정에 AI가 도입되며 후보물질 발굴, 임상시험 설계 등이 극대화되어 개발 기간·비용이 약 30~50% 절감될 전망이다.

해외 사례 독자적 유전자 가위, 표적 단백질 분해(TPD) 등 고부가가치 플랫폼을 보유한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이 부상(오릭스 바이오파마 등).

국내 병목 모험자본 위축으로 벤처투자·창업 급감. 바이오·의료 벤처투자('21) 3.4조 → ('23) 1.7조 → ('25) 2.3조원. 창업('18) 508개 → ('23) 288개.

3 기후테크

시장 변화 향후 10년간 기후테크 시장은 약 9배 규모로 고성장할 전망이다. ('25) 317억 달러 → ('35) 2,820억 달러(녹색기술 연구소).

해외 사례 2년 만에 세계 기후테크 유니콘이 42% 증가('22년 83개 → '24년 118개).

국내 병목 전체 91%를 차지하는 中企의 매출 비중은 26%에 불과. VC 투자(1.05조원)는 상위 10개국 평균(7.93조원)의 13% 수준.

4 K-소비재

시장 변화 대기업(ODM)·중소기업(브랜드) 간 협업체계 속에서 K-뷰티가 급성장하며 미국 수입 1위, 글로벌 화장품 수출 2위를 달성했다.

중소기업 비중 K-뷰티 수출액 중 中企 비중이 70%, 타 소비재도 40~80% 수준. 최근 5년간('21~'25) 중소→중견 성장 뷰티 기업 68개사, 신규 유니콘 3개사.

국내 병목 매년 3천여개 뷰티 中企가 신규 수출에 나서지만 2.5천여개는 유통망 입점 애로 등으로 생존하지 못한다.

07 기존 지원체계의 보완 필요사항

부처·사업 간 분절, 소액·나눠주기 방식의 보조금에 치중한 정책은 중견기업 성장, 글로벌 선도, 생산성 혁신 등 실질적 성과 창출에 미흡했다.

분절 지원

부처간·사업간 별도 선발 및 별도 지원 방식으로 기업 성장경로(창업-R&D-사업화-투자-생산·판로)에 맞는 밀착 지원에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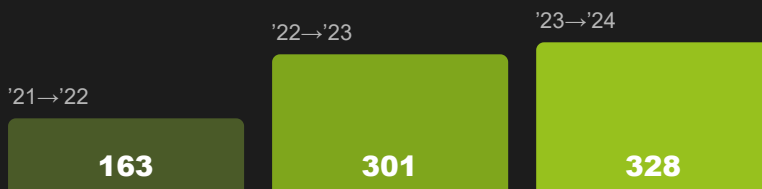
보조금 위주

자금 지원에 치중하여 규제 개선, 실증·인증, 초기 판로·조달 등 자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병목에는 대응이 부족.

나눠주기

몇천만원 수준의 일회성 지원금이 당장의 경영 애로 해결에만 쓰이며 수혜기업 성장이 일시적·단기간에 그침. 전(全)부처 中企 지원사업 중 5,000만원 미만 사업이 23.2%.

결과 —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은 여전히 0.2% 내외



국내 중기업 13.5만개사 중 매년 0.2% 내외만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다. 성장 사다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 (단위: 개사)

08 정책방향 — 패러다임 전환

- ◇ 나뉘주기에서 혁신기업 성장경로에 부합하는 맞춤형·묶음·장기간 지원 방식으로 전환 → 중견·글로벌기업 도약을 확실하게 뒷받침
- ◇ 창업·투자·인프라·규제 등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정책기능 결집 → 개별기업 지원을 넘어 혁신생태계 육성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

현재 全 업종 분산 지원	→	전환 신성장 분야 집중 新安보 · 제약바이오 · 기후테크 · K-소비재
현재 多기업 · 나뉘주기 단년도 일회성 / 보조금 치중	→	전환 최상위 1% 혁신기업 300개사 집중 지원 ▪ 맞춤형 — 기업별 전문 컨설팅 ▪ 묶음 — 사업화·금융·수출·인력 등 ▪ 장기간 — 최대 5년
현재 부처별 분절지원	→	전환 정책 결집·연결로 기업 생태계 조성 중기부(성장수단) + 관계부처(인프라·규제) — 국방부·방사청(부대·데이터, 첨단기술형 획득), 복지부(병원 장비·데이터, 바이오클러스터), 기후부(한전·수공 기술이전·창업, 녹색융합클러스터), 식약처(화장품지원센터), 외교부(재외공관)

09 협업체계와 300개사 발굴

범부처 협업체계 — 총괄·조정과 분야별 협업의 역할 분담

중기부

- ▶ 사업 기획
- ▶ R&D, 기술사업화, 벤처투자, 자금지원 등 기업 지원
- ▶ 사업화·금융·수출·인력·벤처투자 등 스케일업 기능 집중

기획처

- ▶ 예산 편성·재원 배분
- ▶ 부처·사업간 중복 조정
- ▶ 부처간 쟁점 협의 및 협업 촉진

소관부처

- 국방부, 방사청, 복지부, 기후부, 문체부 등
- ▶ 분야별 기업 및 성장 디렉터 추천
 - ▶ 부처 특화 인프라 제공
 - ▶ 네트워크(공공기관·협업기업)·규제제거(샌드박스)

중소정책심의회 등을 활용하여 관계부처·민간이 함께 신성장 분야·집중품목 등을 논의·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육성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한다.

혁신기업 年 300개사 발굴 — 3단계 평가

1 성장성·잠재력 확인

AI·빅데이터 기반으로 기업의 매출·고용 증가, 기술, 인력, 인프라 등을 복합 분석하여 성장성·잠재력을 확인

2 서류·현장평가

민관합동평가단을 통해 성장전략, 혁신역량, 기술사업성 등 평가 — 기술전문가(교수·연구원), 성장전문가(AC·VC·CVC), 지원기관(정책기관 심사역)

3 심층토론·공동 선정

관련 분야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혁신기업 年 300개사 공동 선정

예시 배분 新안보 100 · 제약바이오 50 · 기후테크 50 · K-소비재 100개사

‘성장 디렉터’를 통한 전문 컨설팅

관계부처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출연연, 글로벌 컨설팅사 등 기업 성장 전문가를 ‘성장 디렉터’로 지정하고 혁신기업별로 전담 배정한다.

① 성장전략 수립

기업별 경영 상황을 심층 진단하고, 대·내외 기술·경제 동향을 고려한 맞춤형 성장전략 수립

② 지원 프로그램 제안

성장전략 달성에 필요한 연차별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중기부에 제안

③ 마일스톤 설정

연도별 달성 가능한 마일스톤을 기업·성장디렉터가 함께 설정 — 매출·고용 성장률, 시장점유율, 투자유치액 등

10 묶음 지원과 5년 포트폴리오

성장디렉터가 제안한 기업별 성장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묶음으로 우선 2년간 패스트트랙 지원한다(사업별 최소 요건만 확인, 기존 평가 생략). 2년 후 마일스톤 달성 시 3년간 추가 지원하여 **최장 5년간 기업당 최대 100억원 + α**를 지원하며, 장기적으로 총 지원물량을 1,000개사로 엄격히 제한해 정책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묶음 지원사업

분야	묶음지원사업	지원내용	年 지원단가
사업화	기술사업화 패키지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사업화 진단·처방 및 사업화 서비스 지원	기업당 평균 2억원
	프로젝트방식 R&D 보증	정부 R&D 완료 또는 공공 기술 이전을 받은 기업에 사업화 자금 조달을 위한 보증 지원	기업당 평균 15억원
	구매연계·상생협력 R&D	공공기관 등 中企 기술 수요처의 구매 수요 기반 R&D 지원	기업당 3억원
금융	혁신성장 지원자금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융자) 공급	기업당 평균 4.3억원
수출	수출성장 패키지	디자인 개발, 바이어 발굴, 인증 등 각종 수출 서비스를 메뉴판 식으로 종합 지원	기업당 평균 1억원
인력	신성장 연구인력지원	R&D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1명당 평균 0.3억원
분야별 특화		중기부 분야별 특화 R&D, 모태펀드 등 / 관계부처 데이터, 규제·실증·인증, 조달 지원 등	사업별 상이

* '27년 재정투자 규모(중기부, 정부안 최종 기준) 2,388억원 — 계속사업: 기술사업화 패키지(300억원) 등 10개 사업 2,173억원 / 신규사업: 신성장 혁신기업 전 문컨설팅(100억원) 등 5개 사업 215억원

新安보 중소기업 A사 5년 지원 포트폴리오 (예시)

분야	내역사업명	1	2	3	4	5	지원금액
컨설팅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0.3억원
	新安보 모태펀드						25억원 Series A 전제
R&D-사업 화	공공수요연계 R&D						100억원 5년 × 20억
	신성장 연구인력지원						2억원 2회 × 1억
	기술사업화 패키지						6억원 시제품·실증·인증 2억 × 3회
	수출성장패키지						2억원 2회 × 1억
생산(금융)·수출	혁신성장지원자금						시설자금 15억원
합계							100억원 + α

전담창구 지원기능 (예시)

민간 벤처캐피탈 대상 정기적 IR 개최 등으로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수요·판로 확보 지원 등을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① 투자 유치

분기별 정례 IR, 국내외 VC·CVC로 구성된 검증된 투자자 네트 워크 상시 연결

② 제도 개선

규제·인증 애로를 취합해 소관부처 제출, 부처 회신 및 처리결과 통보

③ 수요·판로 확보

대기업·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매칭, 공공 시범구매 우선배정, 대 기업 현지 유통망 입점 연계

④ 데이터·인프라

부처 보유 데이터·연구장비·실증장비 등 활용 지원

⑤ 인재·경영역량

혁신기업 네트워킹 행사 정기 개최, CEO 동료학습 그룹·마스터 클래스, 임원급 서치 지원

⑥ 브랜드·글로벌

국가대표 브랜드 부여, 국제행사(CES·VivaTech 등) 국가관 우 선 배정, 재외공관·해외거점 상주 지원

11 분야별 관계부처 정책 집결

중기부·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성장 분야별 세부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한다. ①신안보(중기부·방사청 등, '26.6 발표 완료), ② 제약바이오(중기부·복지부 등, '26.9 예정), ③기후테크(중기부·기후부 등, '26.10 예정), ④K-소비재(중기부·문체부 등, '26.9 예정).

01 新안보 중기부 · 국방부 · 방사청 등

벤처투자	新안보 전문 투자기관(한국형 IQT)을 신설하고 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정부가 100% 직접 투자하여 초기 리스크를 부담한다. (중기부·방사청)
실증지원	군 부대·데이터 등을 활용한 기술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 드론실증부대, 훈련장 등을 통한 드론 실증 지원. (국방부·방사청)
신속조달	혁신 촉진형 계약을 도입하고 획득 제도를 공모형·애자일 방식으로 전환해 첨단기술의 신속한 군 적용을 지원한다. 혁신 기업 가점부여, 마일스톤 대금 지급, 기업·구매자 책임 면책 등 한국형 OTA 도입. (재경·국방부·방사청)
기반조성	「(가칭)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26.下 발의),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위원장 총리) 및 추진단 설치. (중기부)

02 제약바이오 중기부 · 복지부 등

창업생태계	병원 연구자 등을 위한 맞춤형 창업경로를 구축하고, 바이오 스타트업 특화지원 인프라 및 대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을 지원한다. K-바이오랩허브(송도, 중기부), 연구아이디어 기술사업화 챌린지(복지부).
맞춤형 성장	병원 의료 장비·데이터 활용, 협업 R&D 등을 통해 후보물질 발굴·비임상 검증·임상 진입·사업화까지 전(全)주기를 지원한다. 복지부가 우수기업을 선정·추천하고 중기부가 펀딩연계 및 R&D 자금을 매칭한다.
규제 개선	기업·연구소 등이 집적한 바이오 클러스터(16개) 등에 찾아가는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규제를 발굴·해소한다. (복지·중기부)
글로벌	수출바우처, 글로벌 파트너 구축, 해외 빅파마 공동 R&D, 운전자금 지원 등을 통해 현지 시장 진출·안착을 지원한다.

03 기후테크 중기부 · 기후부 등

사업화	창업대전, 기후테크 챌린지 등을 통해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기후테크형 TIPS 특화 지원 등 후속 사업화로 연계한다. (기후·중기부)
규제·실증	기후테크 규제특례 신설(기후부), 규제자유특구 확대(중기부), 대기업·공공기관 인프라 활용 실증테스트베드 확대. 기후테크 TIPS 타운, 녹색융합클러스터, 에너지 특화도시 등 지역기반 클러스터 활용.
자금공급	단계별 맞춤형 자금·보증 — (창업초기) 창업자금·교육·보증, (성장기) 투자연계 R&D, (확대기) M&A 보증.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기후부),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중기부) 등 특화 펀드 확대.
공공판로	공공부문의 기후테크 제품 시범구매 등 초기 판로를 지원한다. (기후·중기부·조달청)

수출거점	외국인 관광객 접점 지역에 중앙·지방 정부 지원 정책을 결합한 K-뷰티 클러스터를 구축해 글로벌 진출 거점으로 육성한다. ❶ 인프라 구축, ❷ 팝업스토어·체험관 운영, 수출·투자 바이어 상담 운영 등. (중기·복지부)
규제·IP	물류, 통관, 수출 규제, IP 등 소비재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해외 규제 대응 밀착 지원,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가동. (중기·복지부·지재처·관세청)
판로개척	현지 유통망을 보유한 대기업의 인프라·네트워크를 활용해 소비재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한류콘텐츠(K-CON 등) 연계 홍보·판촉전, 해외 유통망 활용 판로·마케팅 등. (중기·문체·복지부)
온라인 수출	뷰티, 패션 등 소비재 분야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 수출 플랫폼을 엄선해 스케일업·현지화 등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중기부)

12 향후 추진계획

분야별 주요 과제와 담당 부처,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주요 과제	부처	일정
1. 新안보 분야		
미래 新안보 혁신기업 및 후보기업 지정	중기부, 방사청 등	'27.하
전문 투자기관(한국형 IQT) 신설	중기부, 기획처, 방사청 등	'27.상
국방 R&D 연계 지원, OTA형 R&D 및 실증 지원	국방부, 중기부, 방사청 등	'27.하
「(가칭)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안 발의	중기부	'26.하
2. 제약바이오 분야		
우수 제약바이오벤처 스케일업 팁스 지원	복지부, 중기부 등	'26.하
해외 빅파마 공동 R&D 지원	중기부	'26.하
비수도권 바이오클러스터 릴레이 간담회 개최	중기부	'27.상
K-바이오랩허브 착공 및 연구장비 구축	복지부, 중기부 등	'26.하
3. 기후테크 분야		
대기업, 공공 인프라 활용한 실증테스트베드 확대	기후부, 중기부	'26.하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금융지원 확대	기후부, 중기부	'26.하
기후테크 규제특례 신설, 규제자유특구 확대	기후부, 중기부	'27.상
공공조달·해외진출 등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기후부, 중기부	'26.하
4. K-소비재 분야		
수출전략품목 공모 및 선정	중기부	'27.상
소비재 분야 중소 수출 플랫폼 글로벌화, 판로 개척 지원	중기부	'27.하
K-뷰티 수출 거점 후보지 선정 및 조성	중기부	'27.하

맺음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절반 가까이 손보아 확보한 4조원은 단순한 감축의 결과가 아니라 재배치의 재원이다. 정부는 예산을 '효과가 높은 혁신기업'과 '지역 성장'에 집중하고,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개사에 맞춤형·묵음·장기간 지원을 제공하여 중견·글로벌기업 도약을 뒷받침한다. 총 지원물량을 1,000개사로 엄격히 제한해 정책 브랜드의 가치를 지켜 나갈 계획이다.